현장과 시각

농지 '무장해제' 안된다

이종태
경제부 부장

때아닌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가 농도 광주·전남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초 '대체농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역별로 농업진흥지역을 대체할 토지가 부족한데다 지자체의 지역개발 사업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족'을 달았다.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란 뭔가.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절대농지)를 공단건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같은 면적으로 농지를 확보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인 우량농지를 지키자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출범하자마자 '기업 프렌들리'를 부르짖는 새정부가 이 '보호막'을 가차없이 거둬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쌀까지 수입되는 마당에 농사지어 먹고 산다는 것은 애당초 틀린 것 아니냐"며 "농지가 개발지역으로 바뀌면 놀리는 논 비싼 값에 팔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자조섞인 푸념도 나온다.

그러나 대다수 광주·전남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J모(58·나주)씨는 "FTA 등으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절대농지까지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제는 끝장"이라며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살아남는 농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도 "국제 곡물값이 폭등하고 식량수급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우량농지 확보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지의 난개발은 물론 농촌을 또하나의 투기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체농지 지정제의 폐지가 아니더라도, 광주·전남의 경지면적은 이미 건축이나 공공시설 건축 등으로 알게 모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경지면적은 32만5천349ha로, 2005년 33만6천159ha에 비해 무려 3.2%(1만810ha)나 감소했다. 1만810ha라면 3천270만평에 달해, 불과 2년 새에 서울 여의도(8.48㎢·257만평)의 12.7배 만한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뀐 셈이다.

세계는 지금 곡물전쟁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20년간 세계 곡물생산은 1% 증가한 반면 소비량은 지난해에만 24% 늘면서 주요 곡물생산국들은 자기 곳간을 먼저 채우기 위해 잇따라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쌀을 제외한 평균 식량자급률이 4.6%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농지의 '무장해제'에 열심이다. 역설적이지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곡물전쟁이 새정부에 농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jtlee@kwangju.co.kr

李대통령 "너무 어려운게 많다"

공천 파동·민심 이반 등 위기의식 토로
불법파업 엄단 재확인…서민대책 가속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너무 어려운 게 많다"고 말했다.

짧은 언급이었으나 최근 악화일로의 대내외 경제환경, 조각 인선파문에 이은 여당내 공천파동, 잇단 흉악범죄로 인한 뒤숭숭한 사회분위기 등 현 시국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역대 정부의 출범초와 비교해 최악의 수준인데다 '4.9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위기의식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민생이 어려운데 선거 시작"=이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서민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이 어려운데 선거가 막 시작됐다"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해달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사전, 사후에 철저한 예방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여야 공천파문으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자칫 과열·혼탁 선거까지 벌어질 경우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처음부터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서민경제대책 추진상황을 확인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이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서민들의 기대감이 많다. 서민을 위해 이뤄진 게 미흡하다"면서 ▲자영업자 소액대출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등 서민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장관 바쁠 뻔"=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의 티타임에서는 '기아차 파업사태'를 화제에 올리며 불법파업에 대한 엄단 의지를 우회적으로 재천명했다. 티타임 도중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찾아 "기아차가 파업한다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은 이 대통령은 "파업을 중단키로 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법무부 장관이 바쁠 뻔 했는데 다행이네"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을 경우 법 집행을 맡은 법무장관이 주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이는 노동계가 비정규직 법안 등을 놓고 대규모 '춘투(春鬪)'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강력한 노동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져 향후 노정(勞政)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직자,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해서야"=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부처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가 이전하면서 남긴 사무기기와 가구를 방치해 논란이 됐던 보건복지가족부에 언급, "주민들이 오죽 보기 싫었으면 신고를 했겠나.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보도되는 것을 보니 공직자 자세가 안돼 있는 것 같다"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꾸짖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공천 내분사태가 계속된 25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입주해 있는 계동 현대빌딩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이라크전 미군 전사 4,000명 넘어서

부시 "이들의 희생 결코 헛되지 않을 것"

지난 20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지 6년째 접어든 가운데 23일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수가 4천명을 넘어서자 미국은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비록 예정됐던 수순이긴 하지만 또하나의 '우울한 이정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4일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외교전략 브리핑에 잇따라 참석, 향후 이라크 대책을 숙의하는 등 전사자 4천명이라는 '슬픈 기록'을 이라크에서의 조기 미군 철수라는 '희망의 계기'로 반전시키기 위해 부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이라크 미군 사령관, 라이언 크로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상황을 논의했으며 오후엔 국무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2시간 동안 전세계 외교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은 국무부 브리핑이 끝난 뒤 이라크 미군 전사자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훗날 이 순간을 돌아보며 여러 세대에 걸친 평화의 토대를 놓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부시 대통령은 전사자들의 가족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中, 티베트 시위 통제 실패"

뉴욕타임스 보도…"공안·군인들 우유부단"

분노한 티베트인들의 시위에 중국 정부가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례적으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티베트에서 지난 14일 시위가 발생한 이후 이를 목격한 수도 라싸의 거주자들이나 외국인들은 시위 진압 공안 병력의 부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위 발생 초기에 공안 병력이 달아나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공안 병력의 부재는 시위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이들이 중국인 거주자를 위협하거나 트럭을 불태우고 중국인 소유 상점에 돌을 던지는 등의 양상으로 이어졌다.

신문은 이에 관한 이유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나 이번 티베트 시위는 1989년의 천안문 민주화 시위와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통제 실패와 정치적인 우유부단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진압 작업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위현장을 돌아다녔던 한 미국인 여성은 "하루 종일 공안이나 군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서 티베트인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현재 라싸에는 수천명의 공안과 인민해방군이 진을 치고 있지만 목격자들은 이들 병력이 예상과 달리 무력하거나 준비가 전혀 안 돼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같이 티베트 시위 진압에 머뭇거린 이유를 놓고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 문제가 여론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 당국이 병력에게 고위층의 승인 없이 시위대에 맞서는 것을 피할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개최 방안 협의" 유명환 외교장관 방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방미기간 "미국 대선정국이라든가 주변 정세 등을 봐서 북핵 6자 본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중국에 이어 미국에 가서도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부터 2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라이스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방미목적에 대해 "4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특히 라이스 장관 및 게이츠 장관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여러가지 생각도 교환할 것이며 북핵문제에 대한 조율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계 인사들을 많이 만나 이명박 새 정부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협력방안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탄 총선 이변 부탄통일당 47석중 44석 차지

왕정 종식과 민주주의 체제 전환을 위해 치러진 '은둔의 왕국' 부탄 총선에서 예상 밖의 '깜짝' 결과가 나왔다.

부탄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밤(현지 시각) 총선 결과 총 47개 하원 의석 가운데 44개 의석이 부탄통일당(DPT)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DPT는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왕정시절 총리를 지낸 지그미 틴리가 주도하는 정당으로 이번 총선에서 패배가 점쳐졌었다.

'은둔의 왕국' 부탄의 지식층을 대변하는 틴리 전 총리는 이로써 공화제로 전환된 부탄에서 다시 한번 총리직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팔덴 체링 DPT 대변인은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국민이 우리에게 보여준 지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